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수입선다변화 조치 해제

- (내용) 산업자원부는 98년 12월 31일을 기해 수입선다변화 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고 있던 일본 상품 48개 품목 가운데 32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함
- 또한 99년 6월 30일에는 나머지 16개 품목까지 모두 해제하여, 78년부터 對日 무역 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음
- 원래 수입선다변화 조치 해제 시기는 99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(IMF)과의 약속으로 인해 6개월 앞당겨진 것임

< 수입 자유화 품목 >

해제 시기	해당 품목
1998년 12월 31일	▲1,000cc 초과 1,500cc 이하 스테이션왜건 ▲1,500cc 초과 3,000cc 이하 지프형 자동차(가솔린형) ▲1,500cc 초과 2,500cc 이하 지프형 자동차(디젤형) ▲철강어선 ▲캠코더 ▲컴포넌트(오디오) ▲FDD ▲플라스틱 지퍼 ▲도자기류(2종) ▲복사기 ▲자동포장기계 ▲지게차 ▲레피어직기 ▲NC 밀링머신 ▲플라스틱 사출성형기 ▲볼베어링 ▲이동식 소형발전기 ▲휴대용 전동공구 ▲35mm 사진기(파인더 갖춘 것) ▲아날로그 손목시계 ▲자동차단기 ▲냉동컴프레서 ▲선박용 엔진부품 ▲단기통 소형엔진 ▲내화플레이트 ▲폴리우레탄 인조피혁 ▲초산셀룰로스의 필라멘트로 ▲폴리아크릴아미드 ▲아세톤 ▲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▲밀가루
1999년 6월 30일	▲1,000cc 초과 1,500cc 이하 세단형 자동차 ▲1,500cc 초과 3,000cc 이하 세단형 자동차 ▲3,000cc 초과 세단형 자동차 ▲1,500cc 초과 3,000cc 이하 스테이션왜건 ▲2,500cc 초과 지프형 자동차 ▲차량용 엔진부품 ▲기타 자동차부품(새시 부분품 등) ▲굴착기 ▲머시닝센터 ▲NC 선반 ▲25인치 이상 컬러 TV ▲VTR ▲핸드폰 ▲전기밥솥 ▲35mm 사진기(기타) ▲래디얼 타이어

- (影響)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잠식이 불가피함
- 특히 자동차와 가전 제품의 시장 잠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,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응능력이 처지는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

- 것으로 판단됨
 - 산업연구원은 일본 자동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0년의 3%(45,000대)에서 2005년에는 10%(149,000대)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 - 또 일제 컬러 TV의 경우 개방과 동시에 10% 이상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, 콤팩트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기술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카메라 시장도 2~3년 안에 40% 가량 잠식될 전망이다
 - 이밖에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캠코더 시장 역시 급속히 잠식될 전망이다
- (政府의 對應) 정부는 수입 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, 부품공용화 및 표준화 사업 추진, 산업피해구제제도 적극 활용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
- 우선 자동차, 공장기계, 캠코더 등 핵심품목의 신기술개발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
 - 또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, 굴삭기 등 14개 품목의 부품공용화 및 표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, 특히 자본재산업의 육성, 중소기업 지원, 기술개발촉진 시책과 연계해 국산화 비율을 크게 제고할 계획임
 - 만약 일본 기업의 덤핑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대처할 방침임
 - 한편,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억제신발과 가공피혁에 대한 관세쿼터제와 같은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임

□ 정부 정책 동향 (12. 21~12. 29)

국무회의(12.21): 경기부양·SOC 예산 내년 상반기에 77% 배정	- 전체 일반회계예산 중 67%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진작 효과가 큰 주요 투자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
정책평가위원회(12.22): 빅딜 정책의 업종전문화 효과 미흡 평가	- 빅딜이 사업교환 방식보다는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기인한다고 분석 - 일부 업종의 부실 기업간 합병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부실 심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
관계장관회의(12.22):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마 련	- 상반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과 '자발적 에너지 절약 약정'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체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8개 부문 36개 시책 마련 실시
국회 보건복지위원회(12.23): 국민건강보험법안 의결	- 2000년부터 의료보험 통합, 단 재정은 2002년 통합 - 의료보험 수가 인상률을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간의 계약으로 결정
금융감독위원회(12.23):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제 도적 장치 다각도로 검토	-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, 정보요구권 부여 등 사외이사 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- 감사제도 미국식 '감사위원회제'나 독일식 '감사회제'로 전환, 소수주주의 집단소송제도와 집중투표제 도입, 재 무구조개선약정을 감시 장치로 활용
헌법재판소(12.24): 그린벨트제도 일부 헌법 불합치 판시	-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개발제한에 따른 피 해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판시
재정경제부(12.24): 수입관세 인하 발표	- 특정 상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정관세 적 용 품목을 현행 38개에서 29개로 축소하여 관세 인하
산업자원부(12.29): 수입선다변화 조치 완화로 일본상품 수입자유화 확대	- 31일부터 48개 품목 중 32개 해제하였으며 내년 6월 30 일엔 나머지 16개 품목도 모두 해제할 예정 - 주요 품목: 캠코더, 복사기, 지게차, 철강어선 등
정보통신부(12.29): 99년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료 20~30% 인하	- 원가절감 촉진 및 이용요금 인하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의 일환 - 이를 위해 통화요금 인가제를 요금 상·하한제로 변경 할 방침

(홍 성 민 hsamu@hri.co.kr ☎724-4034)